

우울·답답·불안...지쳐가는 시민들 '코로나 블루' 급증

#1 "코로나에 걸릴까 사람도 안 만나고 회사와 집만 오가고 주말에도 집에서 하루종일 지내다보니 몽롱해지고 일도 손에 안 잡힌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리다 어느 날 나도 감염되면 어쩌나 불안하다."

#2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훨씬 힘들어졌다. 희망도 없애지고 언제까지 해야 할 지도 답답하고. 언론에서 장기화되고 일상화된 다는데...어차피 집단 면역 된다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갈수록 우울해지고, 무력해진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스트레스·우울증 등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지역민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코로나 블루' 호소하는 시민들=광주시와 자치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성된 '코로나19 심리지원단'과 '5개 자치구 심리지원반'을 구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심리지원단과 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심리지원반이 지난 2월부터 지난 31일까지 진행된 코로나 블루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 건수는 7433건에 이른다.

상담건수는 2월 23건에 머물다가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1216건(3월)→1183건(4월)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던 5-6월에는 각각 493, 402건으로 줄었다가 2차 유행이 시작된 7월엔 상담 전화만 3004건에 달할 정도로 심리 상담을 위한 문의가 폭증했다. 시민들은 지난달에도 1112건의 상담을 의뢰하는 등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감,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이 아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일반 시민들과 자가격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점에서 코로나 감염증 사태에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몽롱해지고 일도 손에 안잡혀...
광주 심리지원단 7433건 상담
7·8월에만 4000건 넘어

경제적 충격까지 더해져 심화
사회적 약자 안전망 붕괴 우려
시민 정신건강 대책 마련 절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정신요리기관이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전화 뿐 아니라 코로나 증상, 치료 과정, 검체 채취 장소 등을 묻는 상담 전화 건수도 8392건(2~8월)에 달했다.

◇불편·불안·우울 호소하다 분노로 이어져=광주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2800건의 상담을 진행해왔다.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요원들은 불안·우울·분노 등의 감정을 드러내는 상담자들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상담자들의 경우 제일 먼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걸 왜 나만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노하고 화를 낸다는 것이다. 이들과 상담하면서 이같은 감정을 다독여주고 최대한 현실성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상담 전문요원들의 설명이다.

노인 상담자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외출을 못하는 데 따른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대화 상대를 찾는다고 했다.

자가격리자, 격리해제자 등은 감염 경로와 관련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면서 겪는 우울감, 스트레스로 심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게 상담요원들 설명이다.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정보공개도 자가격리자들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면서 지역민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해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확산 방지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위기 더해지면 심각해질 우려=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확산할 경우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사실상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이다.

전문가들은 심리적 위축으로 힘들하는 시민들이



분주한 배달 오토바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광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지난 3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식당가를 주변으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음식들을 배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경제적 위기까지 맞닥뜨리면서 자칫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코로나 19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이나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

상은 코로나가 찾아지더라도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 경제적 안정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면서 외부 모임이 자제되더라도 일상에 서 규칙적인 운동을 곁들여 일상의 리듬을 잘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즉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곡성 산사태 관련 시공사 관계자 등 5명 입건

경찰, 人災 판단...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산사태(광주일보 2020년 8월 10일 3면)와 관련, 경찰이 당시 산사태 현장 도로공사를 맡았던 시공사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집중호우가 예보됐음에도, 공사현장 내 흙이 쓸려내려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안일함이 사고를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발주처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부실한 관리·책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곡성경찰은 곡성군 산사태와 관련, 인근 국도 15호선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로 시공사와 현장사무소 관계자 3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을 입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곡성에 집중호우가 예보됐음에도 도로 공사를 위해 절개한 땅에 빗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방수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된 데 따라 집중호우를 대비, 공사 현장 흙이 마을로 쓸려내려가지 않도록 흙막이 시설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곡성 산사태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업 발주처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에서 지난 2004년 태풍 메기로 도로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 보강공사까지 진행했는데도 관련 자료가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곡성경찰측은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점부터 지반이 무너져 500m 정도 떨어진 주택을 덮친 것으로 보인다"며 "설계상 하자, 안전 조치 부실, 관리 감독 부실 등을 총체적으로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산구 '황당 과태료 18억'...알고보니 대상자 잘못 선정

광주 광산구가 불법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내건 책임을 물어 1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렸다가 대상자를 잘못 선정했다며 법원에서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A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건설사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사에 5억9700만원의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산구는 관할구역에 허가없이 부착된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에 적힌 명칭을 근거로 A사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 22차례에 걸쳐 18억9400만원의 과태료

불법 분양 현수막 적발하며
제대로 확인 안하고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도 안줘
법원 "5억9700만원 지급하라"

를 부과했고 A사는 전체 과태료의 일부인 5억 9700여만원을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A사측은 "현수막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고 부과 통지 일부를 다른 업체로 보낸 광산구의 행정 처분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A사는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도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광산구는 "아파트 신축 사업 업무대행사에게 조합원 모집 시 명칭과 브랜드 사용을 허락한 만큼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와 공모해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해당한다"면서 "A사와 협의했다는 업무대행사 요청으로 해당 주소지로 부과 통지를 보낸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과태료 부과 결정의 상대방을 A사로 잘못 지정했다"면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A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맡은 업무대행사에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일 뿐, 해당 사업의 조합원 모집이나 분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업무대행사가 참여의향서상 A사의 승낙 범위를 넘어 임의로 광고물에 명칭을 게시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광산구가 과태료 부과 결정 전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과 통지를 업무대행사로 보낸 것도 A사의 확인 절차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